

요진건설산업 산불피해 성금 1000만원 기탁

“이재민 조기 일상복귀 기원”

원주 요진건설산업 (대표 최은상 부회장·사진)이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

요진건설산업은 최근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요진건설산업이 기탁한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과 속초, 강릉 등 산불피해지역의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은상 대표는 “이번 동해안 산불피해로 고통을 겪는 이재민들이 일상 생활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관호

하반기부터 '적정공사비 확보' 길 열린다

기재부, 건설업계와 간담회서 "계약예규 이달중 개선할 것"

건설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일부가 시행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간담회는 기재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

한 추진일정 및 개선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약예규를 개정해 개선방안의 빠른 시행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상·하위 20% 제외) △고난이도 공사에 세부공종 단가심사 도입 △적격심사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예정가격 산정 시 사급자재 관급단가 적용 배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달 내 계약예규가 개정되더라도 일선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규정 개정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작동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간이중심제', '대안제시형 낙찰제' 등 새로운 입찰제도도 이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너무 어렵다.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업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hoony@

뉴스 Focus 계약예규 이달 중 개정... 이르면 7~8월 시행

중심제 균형가격 산정 개선 등 기대감 동점자 처리기준은 시범사업 후 보완

(균형가격 근접자 우선)

기획재정부가 최근 건설업계와 만나 약속한 계약예규 개정 내용은 올해 초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담긴 것들이다. 개선방안 발표 당시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 시기를 올해 1분기라고 밝혔지만, '구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건설업계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다소 늦어진 만큼 빠른 시행을 약속했다. 이달 중으로 계약예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 입찰 시 가격평가 합리화와 공사비 적정성 제고로 나뉜다.

가격평가 합리화 측면에서는 우선 중심제의 경우 균형가격 산정 방식이 현행 상위 40%, 하위 20% 제외에서 상·하위 20% 제외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균형가격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

간이중심제 등 시범사업도 속도낼 듯... 내달 발주 예상

상된다.

또한, 고난도 공사에도 세부공종 단가 심사를 도입한다. 그동안 고난도 공사에는 단가심사가 없어 낙찰률이 70% 초반에서 형성됐다. 다만, 동점 시 최저 입찰자에서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하는 동점자 처리기준은 시범사업을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적격심사에서는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이 제외된다. 적정공사비 삭감을 방지하는 조치다. 제외 대상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공사비 적정성 제고 측면에서는 먼저

사급자재의 관급단가 사용이 배제된다. 그동안 사급자재에 대량구매 조건으로 결정된 관급자재 가격을 적용해 공사비가 깎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예정가격 작성 시 추후수당(5일 근무 기준 1일 수당) 계산, 하도급업체 간 접비 지급대상에 포함 등의 내용도 계약예규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업계가 이익을 더 보려는 것이 아닌, 그동안 손실로 접했던 부분을 보정하는 차원"이라며 "속히 시행돼 다소나마 적정공사비가 확보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계약예규 개정 후 일선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7~8월 시행이 유력하다.

한편,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간이중심제', '대안제시형 낙찰제' 등 새롭게 도입

되는 입찰제도에 대해서도 빠른 시행을 언급했다. 이달 중으로 발주기관의 특례가 인정되면 당장 다음달에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에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발주기관과 의견을 조율했다. 시범사업은 10여개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만, 중소건설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이중심제는 현행 적격심사 구간인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기술평가를 강화하는 것이고,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우수제안자 간의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정희훈기자 hoony@